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행복 금융 실현한다~

광전매일신문

유디철강(주) 철근공장 기계가공
철근 · 철강재 도 · 소매
유디기업(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계
대표이사 신 현 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14-9(연산동 1280)
TEL : 062-942-7577 FAX : 062-942-7576
MOBILE : 010-2645-5325 E-MAIL : ud7577@naver.com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지난 4일 오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 북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이 제일 싸다"… 유가 급등에 광주·전남 운송업계 '비상'

광주 1867원, 11%↑… 경유 1879원 '휘발유 추월'

화물·배달업계 "남는 게 없다, 앞으로 더 걱정"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화물차와 택배 차량 등 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기름값이 무섭게 오른다"면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681원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867원까지 오르며 186원(11.1%) 상승했다. 특히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590원에서 1879원으로 289원(18.2%)이나 뛰며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전남 역시 이 기간 휘발유는 ℓ당 1706원에서 1857원으로 151원(8.6%), 경유는 1607원에서 1861원으로 254원(15.8%) 상승했다.

단 열흘 새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료 사용량이 많은 지역 운송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5t 화물차를 운행하는 김모(58)씨는 "장거리 운행을 한 번 하면 기름값만 수십만원이 들어간다"며 "운임은 그대로인데 기름값이 오르니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어진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들이나 배달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택배 차량은 상당수가 경유를 사용하는 1t 화물차가 많고, 오토바이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어 유가 상승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광주 한 택배사업소 소장 김모(48)씨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배달 일을 하는 한 라이더도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기름값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주유소를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 무섭게 기름값이 올라있다. 기름통을 사다 미리 사두는 동료들도 있다"고 했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업인들도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보통 한 달 단위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여수지역 어업용 경유 가격은 한 드럼(200ℓ)당 17만6940원이다. 이달까지 현 가격을 유지하지만, 유가 급등 사태가 길어지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의 한 어민은 "어선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만만치 않다. 조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류비가 크게 오르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며 "한달 뒤 한꺼번에 면세유 가격이 오르면 심리적인 부담도 클 듯 하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기름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전쟁이 난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유소 판매 가격이 벌써 크게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영업용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줄면 보조금도 함께 줄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서 "정부는 주유소의 가격 반영 사례를 전수조사해 유가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유사 마진을 일부 줄이더라도 공급가를 낮추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취재부

6·3지방선거 경선 전쟁… 혼탁 조짐

각 정당 경선 시작되며 예비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 가열

'검증' 미명, 비위·가정사·직함 둘러싼 비방·허위사실 유포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경선 경쟁이 불붙으며 광주·전남 선거구마다 네거티브 공방 등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각 정당이 6·3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속속 확정하며 예비후보 간 공방이 벌써부터 불꽃을 튀기고 있다.

앞으로 한 달 가량 펼쳐질 당내 경선이 조기 과열되며 고소·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남 한 군수 선거 후보 A씨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일각에서 비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앞서 현직 군수와 함께 경찰이 수사 중인 계약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 출마 예정자 B씨는 '특정 기업이 각급 출마예정자들의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모 지역신문 보도에 "악의적인 가짜뉴스이며 조직적인 배후 세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남 또 다른 선거구에서는 군수 예비후보 C씨가 '개인 비위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허위 문자메시지가 선거구민에게 무차별 유포됐다며 경쟁 후보의 배우자를 배후로 지목, 고발했다.

당 공천 적격 심사를 앞두고 후보 간 공방도 치열하다.

전남 한 단체장 후보는 '선거법·당규 위반 주장을 당원들에게 유포하고 당사 앞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광주 모 구청장 당내 경선 주자 사이에서는 가·감산점제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일었다.

경선 참여 적격을 따지는 공천 심사 전 통보받은 가·감점이 경선에서 곧바로 적용되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경쟁 후보의 가점을 허위로 알렸다는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후보는 경쟁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과거 탈당 전력, 개인 비위나 가족사, 후보 직함·이력 허위 기재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후보 검증, 진상 규명 요구 등 형태로 교묘히 특정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까지 네거티브 공세에 동원돼 관련 수사 의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막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거나 공천 불복에 따른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각종 비방·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 검증 명목으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가 잇따르다보면 정책·공약 경쟁이 실종될 수 있다. 투표율 저하, 정치 불신 팽배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원 기자

지 면 안 내

民 전남광주특별시장 시민배심원제 '백지화'… 거센 반발 3면
"대한독립 만세" 광주서 107년 전 함성 다시 울렸다 9면